



공정정보도

2012-3호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100-210) 서울 중구 수하동 67
/전화398-3620~2/ 팩스398-3630/
발행인 고일환·공보위간사 장용훈

www.newsunion.co.kr

연합뉴스 뒤흔드는 ‘Strongman’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영어단어 하나가 연합뉴스를 뒤흔들고 있다.

‘Strongman’

직을 건 총파업으로 겨우 되살려던 공정보도의 공든탑이 한순간에 다시 무너져버릴 위기에 처했다.

정치부는 7일 오후 타임지를 인용한 다음과 같은기사 한 건을 내보냈다.

<박근혜, 美타임誌최신호표지모델등장>
(서울=연합뉴스) 000 기자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미 시사주간지 ‘타임’의 표지모델로 등장했다.

‘타임’은 오는 17일자 최신포에서 ‘실력자의 딸’이라는 제하의 커버스토리를 통해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 후보의 살아온 역정과 주변 인사들의 평가, 정치 비전 등을 소개했다.

7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역사의 후예’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만약 박 후보가 12월 19일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은 최초의 여성대통령 탄생이라는 최소한 한가지 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또 “박 후보는 그동안 재벌, 기득권층과 친하다고 인식돼온 새누리당을 바꿔 일부 보수층의 반발을 무릅쓰고서라도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개혁을 하려고 한다”고 기술했다.

특히 박 후보의 중소기업, 저소득층 대선공약을 언급하며 “일부에서는 박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박 후보는 ‘정치인인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후보가 당선된다면 ‘어머니와 같은 여성적 지도력’을 발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타임은 박 후보가 어머니인 고 육영수여사를 대항해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대행했던 점, 1979년 10·26사태로 박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휴전선은 안전한가요?”라고 묻는 첫 반응을 보였던 점을 함께 기사에 담았다.

또 보수 언론인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박 후보를 ‘담이 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지지자들은 ‘효녀’라고 묘사했으며

정치분석가들은 그에 대해 ‘강하다’, ‘냉정하다’는 평가를 내린다고 덧붙였다.

타임은 “앞서가고 있는 박 후보가 추격 중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유권자가 (그들이 기억하는) 과거를 잊거나, 용서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끝)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기사는 타임지 아시아판에 실린 기사다. 17일자 타임지 아시아판은 표지가 세가지 인데 박 후보가 표지로 등장하는 것이 그중 하나다.

‘Strongman’s daughter’라는 제목아래엔 ‘박근혜는 한국의 첫 여성대통령이라는 역사를 이루려는 목표가 있다. 하지만 그가 논란이 있는 선친의 과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설명이 달렸다.

새누리당은 보도자료에서 제목의 strongman을 ‘강력한 지도자’로 해석했고 정치부는 이를 ‘실력자’라고 해석해 기사를 송고했다.

이 단어의 뜻과 뉘앙스를 간단히 살펴보자.

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는 롱맨영사전을 보면 이 단어의 뜻을 ‘a politician or leader who uses violence or threats to get what they want’(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폭력이나 협박을 쓰

는 정치인이나 지도자)라고 해설한다.

가장 방대한 뜻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콜린스코빌드 사전에선 ‘통치 방법이 종종 폭력적이거나 비도덕적일 수 있음에도 국가에 대한 엄청난 힘과 장악력이 있는 남자정치인’이라고 돼 있다.

타임지에서 그간 strongman이라고 칭한 인물은 김정일, 카다피, 사담후세인 등이었다.

반면 실력자는 ‘실제로 권력이나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다음 국어사전)이라는 뜻이라는 설명이다.

실력자의 용례는 ‘그 친구는 출세운을 타고났는지 승승장구하며 이제는 그 계통에서 실력자로 부상하였다’로 나온다.

strongman과 달리 가치중립적이거나 다소 긍정적인 단어인 션이다.

기사에서 제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특히 세계적인 유력잡지의 커버스토리로 등장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잡지 표지에 대문짝만하게 적힌 압축된 제목이다.

타임지 아시아판 기사의 원문을 보면 박 후보가 박정희 독재 시대의 명암이 뒤섞인 역사적인 짐을 모두 지고 있다는 중립적인 내용이다.

정치부 기사처럼 찬양일색은 아니었다.

타 매체와 비교하면 문제의 기사의 심각성이 더 드러난다.

-타임은 ‘권력자의 딸’이라는 제목과 함께...인터넷판은 ‘독재자의 딸’이라는 제목을 붙였다(조선)

-박근혜, 타임 표지로 등장...그런데 제목은

타임은 오는 17일자 최신포에서 ‘The STRONGMAN’S DAUGHTER’란 제목과 함께..STRONGMAN의 뜻을 두고 인터넷에선 ‘실력자’와 ‘독재자’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타임 인터넷판의 기사제목은 ‘DICTATOR’S(독재자의) DAUGHTER’로 돼 있다.

타임은 2002년엔 ‘autocrat(독재자)의 딸’로 기술한 적도 있다. (중앙)

-독재자의 딸? 강력한 지도자의 딸?

박근혜, 타임지 표지모델에(한국)

-타임지는 오는 17일자 최신포 인터넷판에서 독재자의 딸(The Dictator’s Daughter)이라는 제하의 커버스토리를 통해..(서울)

-타임은 오는 17일자 아시아판 최신포에 ‘권력자의 딸(The Strongman’s Daughter)’이라는 제목과..(경향)

-철권통치자의 딸(한겨레)

연합뉴스는 정치부의 첫 기사가 송고된지 3시간이 지나서야 국제부에서 종합기사가 송고됐다.

그 사이 이 기사는 인터넷상에서 급속히 퍼져 ‘연합뉴스는 역시 찌라시’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다.

여기서 취재와 기사 작성의 기본을 되돌아보게 된다.

이번 경우처럼 외신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 것은 원문 전체다.

출입처는 부정적인 내용을 숨긴 채 자신에 유리한 면만 부각하거나 부정적인 내용조차 교묘하게 변색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보도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시간에 쫓겨 기사를 작성하다가 불거진 단순한 실수라고 보지 않는다.

이는 단어의 해석에 대한 논란을 넘어서 맥락이 있고 상당히 상징적인 일이다.

정치부는 대선 초기 ‘5.16 쿠데타’를 그냥 5.16으로만 표기했다가 공보위의 지적을 받았다.

이후에도 공보위는 노사 합의로 진행되는 대선보도 점검회의를 통해 꾸준히 여당 편향적인 보도를 지적했음에도 정치부장은 되려 “노조가 편향된 시각을 갖고있다”고 반응했다.

‘독재자’, ‘쿠데타’라는 역사적 평가가 끝난 단순한 팩트마저 감추려 하는 정치부장의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혹시 박 후보의 기사에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 불경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묻고 싶다.

낮뜨거운 ‘박비어천가’.. 정치부장 “문제없다”

박근혜 후보가 대선출마를 선언했던 7월10일 정치부에선 <사상 첫 여성대통령 노리는 박근혜 누구인가>라는 장문의 기사가 송고됐다.

박 후보의 출마선언에 맞춰 닷새전부터 미리 준비한 이 기사의 분량은 3천765자.

경쟁자 문재인 후보의 출마선언(6월17일) 당시 송고된 인물 기사 <문재인, 친노 좌장에서 유력 대선주자로>(1천496자)의 배가 넘는 분량이다.

박 후보의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한 것은 물론 주관적인 평가를 사실인양 단정하는 표현도 문제가 됐다.

“우리나라가 가난에서 탈출해 비약적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을 권력의 심장부에서 생생히 지켜봤다. 조국·민족·국가 같은 단어를 어린 나이에 인지했다”

“27일 새벽1시 박 전 대통령의 유고 소식을 처음 전해들었을때 그의 첫 마디가 ‘전방의 상태는 괜찮습니까’였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국가안보가 DNA처럼 피 속에 박혀 나온 조건반사적 얘기”라



타임지 관련 연합기사에 달린 댓글.

고 회상했다”

“정치인으로서 첫 주목은 2000년 당 총재 경선 때 받았다. 경선에서 이회창 전 총재에 이어 부총재로 당선됐지만 이듬해 ‘이회창 대세론’에 반발해 당 개혁안을 요구하며 탈당, ‘미래연합’을 창당하는 강단을 보였다”

“그는 2009년 미디어법 입법에 반대하며 여권 주류와 한차례 갈등한데 이어, 이듬해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에 반대함으로써 이 대통령과 정면충돌하는 위기를 감수했다. 세종시 원안고수는 그를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하는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으로 각인시켰다”

“애국심, 철저한안보관, 국가·국민에대한사랑은 그가 가진 덕목으로 꼽힌다. 부정부패와 불법에 단호하고, 한번 옳다고 결단한 것을 번복하지 않은 결연함도 그의 장점들로 언급된다”

이 기사는 ‘박비어천가’로 불리며 사내외에서 비판을 받았고 ‘기사가 아니라 위인전’이라는 힐난까지 나왔다.

문제의 기사가 송고된 시점이 공정보도를 위한 총파업이 끝난지 2주도 되지 않은 터라 조합원들이 느끼는 충격은 더 컸다.

공보위는 이에 대해 7월 말 노사편집위원회에서 정치부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이명조 정치부장은 이에 대해 “기사분량은 좀 길었던 측면이 있지만 내용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똑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면 같은 기사를 내보낼 것”이라며 노조의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도넜은 노조에 대한 ‘색깔론’ 공격

이명조 정치부장은 11일 사내게시판을 통해 타임지 기사 등 공보위의 일련의 문제제기에 대해 ‘정치공세’라며 노조에 색깔을 칠했다.

좌파 노조가 보수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기사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노조와 노사합의에 따른 대선보도 점검회의에 대한 편향된 시각은 이번뿐이 아니다.

11월 초 대선보도 점검회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이 서면으로 전달됐

다.
“정치부가 노조 공보위의 지적이 편파적이라며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게시판에 일방적으로 대선보도점검회의 대화록을 게재해 정치부에 모욕을 줬다는 게 정치부의 판단임. 노조의 문제제기는 박 후보 관련 기사에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점검의 초점을 맞춰 기사의 논조에 영향을 미치려하는 것이라고 정치부는 판단할 수 밖에 없음.(중략)
노조의 지적은 정치부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의도된 것으로 판단함. 기사의 제목과

리드가 왜 바뀌었는지 지적하는 것은 과연 노조가 저널리즘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지 조차 의심케되며 답변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 정치부의 판단임.(하략)”

공보위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반론에 강력대응하려 했으나 선후배간 우애와 연합의 가족적인 조직문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여러 선배들의 고언을 받아들였다.

급박하게 진행되는 대선정국에서 대선보도 점검회의의 실효가 우선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부장은 또 사내게시판에서 “정치부장이 기사판단을 하지 않고 후배가 작성한 기사를 송고키만 눌러 내보내는 것이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이중잣대다.
유독 박 후보의 일거수 일투족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며 너무 자세하게 쓰는 경우가 빈발하기 때문에 정치부장으로서 조율이 필요하다는 공보위의 요청엔 이 부장은 “현장 기자가 그렇게 쓰는 데 데스크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또 그런 균형을 맞추기엔 너무 급박하고 시간이 없다”라고 책임을 현장기자에 떠넘겼다.

‘국정원댓글조작’ 사건 능력보도

지난 11일 저녁 8시께부터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주요검색어 상위권은 국정원과 관련된 단어들 이 썩을 이를 했다. 민주통합당이 국정원이 인터넷 댓글조작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이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여직원과 대치중이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연합뉴스에서는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 없었다. 정치부 야당팀이 진성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오후 7시25분과 8시25분, 9시25분 세 차례나 올렸지만 기사는 작성되지 않았다.

또 국정원이 이 사건에 대한 항변을 담은 보도자료를 토대로한 기사조차

10시40분께 작성됐지만 정치부장 손에 길이 됐다.

이 사건과 관련한 기사는 오후 10시 48분 새누리당의 이상일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 후에야 민주당 입장과 국정원 반응, 새누리당 브리핑까지 넣어서 오후 10시59분에 작성돼 11시32분에야 겨우 송고됐다.

연합뉴스는 통신사다. 스트레이트 기사 작성의 기본은 이미 알고 있다. 1보, 종합, 종합2보라는 형식을 통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달하는 시스템. 하지만 이날정치부에서 이런 기본은 지켜지지 않았다.

국정원이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 민감할 수 있지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상황 전개에 따라 비판할 것이 있으면 비판하는 것이 통신이 기능이다.

사실의 민감성을 고려해 기사쓰기를 회피했다면 통신의 역할에 대한 망각이다.

민감한 이슈인만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신중하게 보도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그 또한 어이가 없다.

그간 공보위는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네거티브성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기만 하는 대선보도를 수차례 문제삼았지만 이런 보도행태는 별로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직부장불신임건의절차>

단체협약 14조는 공정보도를 위해 ‘제작국에서 불공정 보도 사례가 빈발할 경우 기자직 조합원 재적 과반의 발의와 재적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해당부장의 불신임을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어 ‘투표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표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노조는 이 조항에 대해 편집국 기자직 조합원이 불신임 건의 발의와 투표권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편집국 정치부, 문화부, 북한부, 사회부, 스포츠레저부, 사진부와 경제분야 4개 부서 등 모두 10개 부서 소속 기자직 조합원 171명이 해당됩니다.